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40
----------	------

발의연월일 : 2025. 3. 10.

발 의 자 : 김한규 · 진선미 · 장철민
민병덕 · 강훈식 · 김태년
윤준병 · 백혜련 · 박정현
임미애 · 박희승 · 이용우
이재정 · 박홍근 · 양부남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외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의 기준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통일성을 갖추하고자 함(안 제1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6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따른”을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의 범위,”로, “국가보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p>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u>따른</u>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u>국가보훈부령</u>으로 정한다.</p> <p>⑧ (생략)</p>	<p>-----.</p> <p>⑦ -----</p> <p>-- <u>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의 범위</u>, -----</p> <p>----- <u>대통령령</u>-----.</p> <p>⑧ (현행과 같음)</p>
--	---